

“중국 15·5규획 에너지 중점 분야의 주요 쟁점”

“中国第 15 次 5 年計画における-エネルギー-重点分野の注目点”

» **저자** : 王婷

» **일자** : 2026년 4월 15일

»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https://www.jri.co.jp/report/researchfocus/detail/16630/>



- ❖ 이 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15·5규획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정책 기초와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이다. 해당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정책 운영의 기준이 되는 청사진으로, 에너지 부문을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강국 건설’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 공급,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 이 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의 신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석탄과 석유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과제를 반영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환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 ❖ 글은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정책 전환으로 설명한다. 첫째, 에너지 소비 관리에서 탄소 배출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탈탄소가 정책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는다. 둘째, 개별 기술 중심 접근에서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의 변화이다.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에너지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이 강조된다. 셋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제도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운영 효율화, 전력시장과 가격체계 개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한다.

- ❖ 이러한 정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네 가지 중점 분야가 제시된다. 공급 측에서는 화력발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유연한 조정 전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고효율·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초고압 송전망과 분산형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한다. 저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설비를 확충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수소, 압축공기, 플로우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수요 측에서는 수요반응과 가상발전소를 통해 전력 수요를 조정하고,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기술을 통해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구조가 확대된다. 시장 측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녹색전력 인증, 녹색금융 등 환경가치 시장이 강화되며, 탈탄소 목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 이 글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축적된 산업 기반과 정부 주도의 추진력에 힘입어 일정한 실현 가능성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전기차 보급, 원자력 및 수소 기술 개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 제어기술 부족,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한계, 전력시장과 가격체계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 문제가 대표적이다.
- ❖ 종합하면, 이 글은 15·5규획을 계기로 중국 에너지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술·시장·제도를 포괄하는 통합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구조적 전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동반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